

상품정보 등록해야 등록표지 발급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가 높은 관심 보이는 사항 반영

기업들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웹북드립 열린소비자포털)에 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해야만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표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구매 전 상품정보(리플·인증) 확인부터 상품 사용 후 피해의 구제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

서 진행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 상품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 종류를 정한다.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통합광고 등 개별법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정보 중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 성분 등,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기

간, 주의사항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품질보증기준 등을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한 상품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만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등록되지 않은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유통표준코드(바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상품에 대해 표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기업 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금융당국,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물이 금융사 실무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건의과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가 발간·배포되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현장점검 개선사례 등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합동 운영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2주년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2015년 4월2일 점검반이 최초 현장 방문한 이후 1595개 금융회사에서 6076건의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의 주요 성과는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과 군 복무 중 병사 체크카드 발급 시 실명확인 절차 완화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점검반이 제도개선사례 홍보 및 과제 처리현황 안내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점검반의 건의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점검반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기여 및 전 금융권 공유를 위해 매년 현장점검 자료집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홍보하는 이메일이 발송된다. /뉴시스



3월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설명회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김현정 지역협력실장(왼쪽)이 지역경제보고서(3월)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호 지역경제팀장.

'100억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 심사 받아야

기재부,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별도 사전평가 받은 사업, 심사 면제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나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예비 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법률상 의무지출 사업이나 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운영출연금 등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도 제외된다.

출연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

는 연구개발사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에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시행해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 상 사후통제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기에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 단는 것이 골자다.

사전적격성 심사는 ▲출연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일찍이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요구 예정 출연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해 재정누수를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이양 관리가 미흡했던 재정관리 사각 지대가 해소돼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재부 '경제교육포털' 오늘 오픈

'명칭공모' 내달 3~14일 '오픈축하 이벤트' 27~31일

기획재정부가 오는 27일 경제교육정보와 콘텐츠 저작도구 등을 제공하는 경제교육포털을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교육포털은 경제교육 자료를 한 곳에 집중, 경제교육의 허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체감하기, 경제놀이터, 교육자료실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 강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구축했고 전문지식 없이도 동영상, 오디오, 시험문제 등을 활용한 교안을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작도구

를 탑재했다.

기재부는 오픈 기념으로 '명칭공모' 및 '오픈축하 이벤트'를 실시한다.

명칭공모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경제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내부심사를 거친 뒤 온라인투표까지 진행해 24일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최우수작 1명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오픈축하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축하 댓글을 남긴 이용자를 매일 50명씩 모두 250명을 추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조용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교육 허브라는 역할에 걸맞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명칭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은행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 통지

금융원, 4월부터 은행연체 알림서비스 '담보제공자'로 확대

다음 달부터 은행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제공자에게도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은행의 연체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우편, 문자메시

지 등으로 방식이 달랐다.

앞으로 은행들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은 문자메시지로 일원화했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협카드, '나라도움카드' 발급 5000좌 돌파

NH농협카드는 국고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인 '나라도움카드' 발급실적이 금융기관 최초로 5000좌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라도움카드 발급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나 기업이다.

모든 회원에게는 연회비, 재발급수수료, 단문메시지서비스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 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돼 있어 보조금 사용처로 부적절한 유흥·사행·레저·미용 등의 업종에

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은 "나라도움카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공공편테크 기술을 재정관리 분야에 적용한 모범적 사례"라며 "모든 보조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라도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 영업점이나 카드고객행복센터(1644-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